

함께하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2026 정기회원총회



- ◆ 때: 2026년 1월 30일(금) 오후 7:00
- ◆ 곳: 함께하는거창 사무실



참여와 자치의 지역공동체
함 께 하 는 거 창

50136

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7길 5, 2F

전 화 055-942-1117

팩 스 055-943-1170

전자우편 cham1117@hanmail.net

누 리 집 <http://gcngo.org>

공동대표 인사말

총회를 맞으면서

상임대표 신 용 균

총회를 맞아 회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작년 이때는 친위쿠데타로 인해 절망하는 심정으로 글을 썼는데, 올해는 밝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마음이 흔쾌합니다. 친위쿠데타라는, 거의 실패할 수 없는 권력자의 폭거를 시민의 힘으로 극복해 낸 것도 그러하거니와,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보니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인이 쌓은 민주주의 역량이 절대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성서 구절이 생각납니다.

‘함께하는 거창’이 지내 온 20여 년간의 세월도 음양으로 이 과정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느끼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되돌아보니 우리가 쌓아 놓은 업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영향을 끼치기도 했고, 많이는 사장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제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제안이 그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오래 생각한 끝에 우리가 쌓아온 일을 책자의 형태로 발행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가까이는 군의원 평가, 보행 도로 제안, 자전거 도로 제안 등에서 멀리는 20여 년간의 활동 자료집이, 장차 한국 지역운동의 새로운 발상, 제안, 활동의 기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의원 평가는 전국 유일의 활동으로서 자료집 발간을 계기로 장차 전국 지자체에 확산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요즘에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가 출판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될 듯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함께하는 거창’에 온라인의 요소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미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조건과 재정적인 문제를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일단 총회 자료집부터 온라인으로 발송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참여

도가 낮았던 총회도 일단 온라인으로 의견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시도를 해보고 차츰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마침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이 분야에 전문가이니 한결 수월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힘든 시기에 ‘함께하는 거창’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종성 사무국장님의 노고에 회원님들과 함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래 세계 정세가 수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더 나은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2026.1

상임대표 신용균 올림



2025년 결산보고



● 회계연도:2025년 1월 1일~12월 31일(단위:원)

1.자 본 현 황

| 자 산 | | 부채와 자본 | |
|-----------|------------|----------|------------|
| 보통예금 | -3,016,566 | 차입금(-통장) | 0 |
| 퇴직위로금 | 6,600,000 | 퇴직위로금 | 6,600,000 |
| 보증금 & 예비비 | 20,000,000 | 자 본 금 | 16,983,434 |
| 합 계 | 23,583,434 | 합 계 | 23,583,434 |

2.2025년 회계별 수입·지출 현황

| 수 입 | | 지 출 | | 잔 액 | |
|---------------|------------|---------------|------------|---------------|-----------|
| 일반회계 (사무국) | 16,753,687 | 일반회계 (사무국) | 19,000,367 | 일반회계 (사무국) | 3,583,434 |
| | | | | 작권모 | 3,547,175 |
| 합 계 | 16,753,687 | 합 계 | 19,000,367 | 합 계 | 7,130,609 |

3.일반회계(사무국) - 전년도 대비 수입

| 수 입 (2024년도) | | | 수 입 (2025년도) | | |
|--------------|----------|------------|--------------|----------|------------|
| 구 분 | 계정과목 | 금 액 | 구 분 | 계정과목 | 금 액 |
| 회비수입 | 전년도 이월금 | 7,954,386 | 회비수입 | 전년도 이월금 | 5,543,094 |
| | 회비수입 | 17,485,000 | | 회비수입 | 15,820,000 |
| | 후원금(사무국) | 0 | | 후원금(사무국) | 0 |
| | 후원금(연구소) | 0 | | 후원금(연구소) | 0 |
| | 후원금(작권모) | 0 | | 후원금(작권모) | 0 |
| 기타수입 | 이자수익 | 4,213 | 기타수입 | 이자수익 | 933,687 |
| | 차입금 | 0 | | 차입금 | 0 |
| | 잡수입 | 0 | | 잡수입 | 0 |
| | 임차보증금 | 0 | | 부대비용 | 0 |
| 수입합계 | | 25,443,599 | 수입합계 | | 22,296,781 |

4.일반회계(사무국) - 전년도 대비 지출

| 지 출 (2024년도) | | | 지 출 (2025년도) | | |
|--------------|----------------|------------|--------------|----------------|------------|
| 구 분 | 계정과목 | 금 액 | 구 분 | 계정과목 | 금 액 |
| 인 건 비 | 활동비 | 14,400,000 | 인 건 비 | 활동비 | 14,400,000 |
| | 상여금 | 300,000 | | 상여금 | 300,000 |
| | 퇴직위로금 | 1,200,000 | | 퇴직위로금 | 1,200,000 |
| | 복리후생비 | 8,790 | | 복리후생비 | 0 |
| 사무유지비 | 건물관리비 | 2,400,000 | 사무유지비 | 건물관리비 | 2,400,000 |
| | 기기구입비 | 550,000 | | 기기구입비 | 0 |
| | 사무용품비 | 156,780 | | 사무용품비 | 0 |
| | 세금과 공과금 | 400 | | 세금과 공과금 | 4,930 |
| | 소모품비 | 0 | | 소모품비 | 0 |
| | 수선비 | | | 수선비 | |
| | 수도광열비 | 187,730 | | 수도광열비 | 174,960 |
| | 통신비 | 324,825 | | 통신비 | 324,837 |
| 사 업 비 | 도서인쇄비 | 450,000 | 사 업 비 | 도서인쇄비 | 400,000 |
| | 발 송 비 | 101,080 | | 발 송 비 | 84,140 |
| | 분 담 금 | 261,500 | | 분 담 금 | 311,500 |
| | 사 업 비 | 604,400 | | 사 업 비 | 600,000 |
| | 회원활동비 (경조금) | | | 회원활동비 (경조금) | |
| | 회 의 비 | 0 | | 회 의 비 | 0 |
| | 출장연수비 | | | 출장연수비 | |
| 사업외비용 | 잡 비 | | 사업외비용 | 잡 비 | |
| | 예비비 | | | 예비비 | |
| | 현 금 | 0 | | 현 금 | |
| 지출합계 | | 20,945,505 | 지출합계 | | 20,200,367 |

5. 계정과목 설명

| 구분 | 계정과목 | 내 용 |
|--------|---------|--------------------------|
| 수 입 | 회비수입 | 회원 회비 수입 |
| | 후원금(사) | 사무국 정기, 부정기 후원금 |
| | 후원금(연) | 교육연구소 후원금 |
| | 사업수익 |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 |
| | 이자수익 | 예금통장 이자 수익 |
| | 차 입 금 | -통장에서 빌려온 돈(부채) |
| | 잡 수 익 | 수입항목이 없는 수입 |
| | 전년도 이월금 | 지난해 장부에서 넘어 온 현금 |
| 지 출 | 급 여 | 상근 실무자 급여, 활동비 |
| | 상 여 금 | 상근 실무자 상여금 |
| | 퇴직위로금 | 상근 실무자 퇴직 적립금 |
| |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 |
| | 건물관리비 | 사무실 월세 |
| | 기기구입비 | 각종 기자재 구입비 |
| | 사무용품비 | 사무용품 구입비 |
| | 세금과 공과금 | 정부, 자치단체에 납부한 세금 |
| | 소모품비 | 쓰레기봉투,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 구입비 |
| | 수 선 비 | 자산 유지, 보수 비용 |
| | 수도광열비 | 상하수도세, 전기세, 냉난방 비용(기름 등) |
| | 통 신 비 | 전화, 인터넷, 문자메세지 발송 비용 |
| | 도서인쇄비 | 소식지 등 인쇄비, 복사비, 도서 구입비 |
| | 발 송 비 | 소식지 등 각종 우편물 발송비, 택배비 |
| | 분 담 금 | 다른 단체와 연대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
| | 사 업 비 | 각종 사업비용 |
| | 회원활동비 | 회원 송년회 등 회원활동을 위한 비용 |
| | 회 의 비 | 회원총회, 각종 회의 개최 경비 |
| | 출장연수비 | 교육, 출장에 필요한 비용 |
| | 잡 비 | 기타 계정과목이 명확하지 않은 지출 |
| | 차입금 상환 | -통장 상환 금액 |
| | 예 비 비 | 예비비 |
| | 현 금 | 현 금 |

● 자산변동 현황(2025년 12월 31일 현재)

| 자 산 | | | |
|-----------------|------------|------------|------------|
| 구 분 | 2024년 | 2025년 | 증감 |
| 보통예금 | 143,094 | -3,016,566 | -3,159,660 |
| 퇴직위로금 | 5,400,000 | 6,600,000 | 1,200,000 |
| 예비비(보증금 및 정기적금) | 20,000,000 | 20,000,000 | 0 |
| 합 계 | 25,543,094 | 23,583,434 | -1,959,660 |

| 부채와 자본 | | | |
|--------|------------|------------|------------|
| 구 분 | 2024년 | 2025년 | 증감 |
| 차입금 | 0 | 0 | 0 |
| 퇴직위로금 | 5,400,000 | 6,600,000 | 1,200,000 |
| 자 본 금 | 20,143,094 | 16,983,434 | -3,159,660 |
| 합 계 | 25,543,094 | 23,583,434 | -1,959,660 |

·보통예금 : 매년 12월 31일 기준 통장 잔액.

·실무자 퇴직위로금 : 660만 원 적립.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및 예금 : 20,000,000원.

(보증금 : 5백만 원, 예금 : 1천5백만 원)

차입금 : 없음.

·자본금 : 2024년에 비해 1,959,660원 감소.



2025년 사업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시도는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함께하는거창』은 이를 민주주의의 문제로 인식하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행동에 나섰다.

유튜브 ‘거창방송’을 통해 온라인 공론장을 형성하고, 서울 집회와 지역 시위에 직접 참여하였다. 특히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군민들의 동참은 지역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

이 활동은 지역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민주주의를 지켜낸 의미 있는 기록이다.

윤석열 대통령 불법 비상계엄 시도에 대한 반대 시민행동

2025년 『함께하는거창』의 활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시도에 반대하는 시민행동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비상계엄은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함께하는 거창은 이 사안을 단순한 정치 쟁점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존립 문제로 인식하고, 초기 단계부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행동에 나섰다.

온라인 활동 - 거창방송 개설과 지역 공론장 형성

『함께하는거창』은 이 사안을 지역 시민들에게 알리고, 왜 문제인지 설명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 ‘거창방송’을 운영하였다.

거창방송을 통해 비상계엄의 위헌성,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시민이 왜 침묵해서는 안 되는지를 주제로 지속적인 영상 콘텐츠를 제작·게시하였다.

특히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이 비상계엄 반대 시위에 참여한 사건은 지역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고, 거창방송 활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민주주의 문제가 특정 세대나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과 직결된 사안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으며, 이 시점을 기점으로 거창방송은 구독자 수 3천 명을 넘는 지역 공론 플랫폼으로 성장하였다.

이는 단순한 채널 성장 수치를 넘어, 지역 사회 내부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공감과 참여가 실제로 확산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였다.

오프라인 활동 - 서울 집회 참여와 시민의 선택

함께하는 거창은 온라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서울에서 열린 주요 집회에도 여

러 차례 직접 참여하였다.

거창에서 서울까지 버스로 이동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참여자들은 불편함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더 크게 공유하고 있었다.

긴 이동 시간 속에서도 시위 참여는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기꺼이 선택한 시민의 행동이었으며, 서로를 격려하며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 자체가 이 운동의 품격과 힘을 보여주었다.

이는 민주주의가 희생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연대와 자발성, 그리고 시민의 기쁨 속에서도 지켜질 수 있음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지역 행동 - 민주광장에서 이어진 시민사회 공동행동

거창에서는 민주광장을 중심으로 시민사회 공동 시위가 매우 자주 이어졌다.

이 행동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단독 행동이 아니라, 거창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뜻을 모아 순번을 정해가며 지속적으로 이어간 공동행동이었다.

이 과정에는 학생, 청년, 중장년,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군민들이 참여하였고, 거창 민주광장은 비상계엄 사안에 대한 지역 공론의 중심 공간이 되었다.

함께하는 거창은 이 공동행동의 한 축으로서 현장 참여와 기록, 온라인 전달을 통해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끊기지 않도록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대규모 일회성 집회가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민주주의를 일상적으로 지켜낸 과정이었으며, “민주주의는 특정한 날이 아니라 시민의 선택이 반복될 때 유지된다”는 메시지를 지역 사회에 분명히 전달한 활동이었다.

활동의 의미

2025년 이 시기의 활동은 『함께하는거창』이 단순한 지역 현안 단체를 넘어,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는 시민단체임을 보여준 출발점이었다.

거창고 학생들의 참여, 각계각층 군민들의 동참, 서울과 거창을 잇는 시민 연대, 그리고 거창방송이라는 온라인 공론장의 성장은 지역 민주주의가 실제로 살아 움직였던 기록이다.

이 활동은 규모보다 방향을, 속도보다 지속을 선택한 『함께하는거창』의 2025년을 대표하는 시민행동이었다.

2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규탄 성명

『함께하는거창』은 거창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아래와 같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규탄! 검찰은 즉각 항고하고, 헌법재판소는 파면을 결정하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정의를 크게 훼손하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며, 법 앞의 평등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퇴진 사회대개혁 거창비상행동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검찰은 즉각 항고해야 한다.

검찰이 이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법 정의의 포기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검찰은 더 이상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즉시 항고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분열시키며, 불법과 비리를 묵인하는 행태로 일관해 왔다. 이미 그의 행위는 법적,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한 지 오래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

셋째, 거창비상행동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이번 결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 항고 촉구 및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압박하는 집회를 개최할 것이며, 전국적인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다. 거창 군민들은 법치와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검찰은 즉각 항고하고, 헌법재판소는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2025년 3월 8일

윤석열퇴진 사회대개혁 거창비상행동

3 윤석열 파면 선고에 대한 입장 성명

『함께하는거창』은 거창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민주주의 회복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밝히는 아래와 같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부쳐 - 국민의 힘으로 지켜낸 민주주의, 이제는 내란 세력 청산으로 나아가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였다.

이번 결정은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권력에 대해 헌법이 응답한 결과이며, 무엇보다 이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깨어있는 국민들의 뜨거운 염원이자 정의를 향한 함성이었다.

윤석열 정권의 탄압과 불의에 맞서 광장에서, 마을에서, 거창 곳곳에서 민주주의의 깃발을 들었던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역사적 승리이다.

국민은 끝내 침묵하지 않았고, 국가는 국민의 목소리에 의해 바로 설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주의 회복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동조하거나 침묵으로 방조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검찰 권력의 오남용, 입법부와 언론에 대한 압박, 사회 전반의 권위주의적 통제에 협력한 세력은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세력이라 할 수 있으며, 국민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거창비상행동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지역에서부터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25년 4월 4일

윤석열퇴진 사회대개혁 거창비상행동

본 성명서는 함께하는 거창을 포함한 거창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구성한 「윤석열퇴진 사회대개혁 거창비상행동」 명의로 발표되었다.

시민단체 『함께하는거창』은 거창군이 추진 중인 양수발전소 유치 사업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다.

본 사업은 1조 5천억 원 규모의 장기 대형 개발 사업으로,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함께하는거창』은 군수의 입장 변화에 대한 설명 부족,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경제적 효과와 환경 영향에 대해 과장 없는 검토와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는 성급한 유치가 아닌, 공론화와 책임 있는 행정 절차를 촉구하였다.

입장문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

거창군이 가북면 일원에 양수발전소 유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1조 5천억 원의 사업비, 600MW 규모의 설비, 약 13년간에 걸친 장기 대형 개발 사업이다.

거창군은 이를 통해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연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은 이번 양수발전소 유치 추진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깊은 우려와 함께,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첫째, 군정 신뢰의 문제다.

구인모 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양수발전소 유치에 대해 ‘돈 먹는 하마’, ‘전시성 토목사업’, ‘제2의 거창구치소 사태 우려’ 등의 표현을 쓰며 강하게 반대했다.

당시 발표된 후보자 보도자료에는 경제성 부족, 송전선로 문제, 주민 건강 및 생태계 훼손에 대한 명확한 지적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며 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음에도,

거창군은 입장 변화의 배경과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군민이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말의 무게는 바뀔 수 없다.

설명 없는 입장 변화는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다.

둘째, 주민 의견 수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이 있다.

거창군은 8회의 설명회와 유치요청결정위원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가북면 전체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특히 반대 의견을 가진 주민들이 보호받고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의문이 제기된다.

모든 군민이 알고, 토론하고, 함께 결정하는 방식이 진정한 지방자치다.

셋째, 경제성과 환경성에 대한 과장 없는 검토가 필요하다.

거창군은 발전소 유치를 통해 약 704억 원의 지원금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의 기존 양수발전소는 운영 인원이 제한적이며,

상주 인구 유입과 장기적 일자리 효과는 과장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산지 훼손, 안개 증가, 수질 오염, 고압 송전선로에 따른 전자파 등 환경적 영향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대응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친환경 발전’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환경 부담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단기 효과만을 앞세운 무리한 유치는 결국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

넷째, 행정의 책임성과 주민 참여 민주주의의 회복이 필요하다.

거창군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설명하고, 과거의 발언과 현재의 방향성 사이에
정합성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다양한 주민 의견을 포괄하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공론화 절차를 정식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급한 유치가 아니라, 열린 검토다.

우리는 묻는다.

양수발전소 유치가 과연 거창의 미래에 부합하는 선택인가?
그에 앞서, 군민 모두가 알고, 토론하고, 결정한 적이 있었는가?

시민 없는 개발은 진정한 발전이 아니다.

‘함께하는 거창’은 이 사업의 전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군정의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촉구한다.

1. 구인모 군수는 입장 변화에 대해 공식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2. 찬반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3. 경제·환경성에 대한 제3의 독립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4. 사업 추진 여부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2025년 4월 8일

함께하는거창

『함께하는거창』은 거창·남해·창원 도립대학 통합이 행정적으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았다. 특히 거창캠퍼스에 계획된 K방산시스템공학부와 방산무기체계 특수대학원 신설은 지역의 생명·보건·복지 중심 교육 정체성과 어떤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단체는 통합과 학과 신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가능성·지역 연계성·재정 지속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주민 참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사회, 학생, 교직원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청하였다.

논평문

“거창대학 통합, 지역과 미래를 위한 준비는 충분한가?” “방산학과 신설, 실현 가능성과 정체성 검토가 선행돼야”

2025년 5월 23일 제5차 대학통합 자문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창원대학교, 거창대학, 남해대학 간 통합은 5월 26일 승인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행협약 체결과 실행계획서 제출이 예정되어 있다. 이제 통합은 행정적으로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 없이 추진된 과정에는 여전히 짙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존재한다.

■ 지역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기능 배치가 필요하다

회의자료에 따르면, 거창캠퍼스에는 2026년부터 정원 91명, 전임교원 8명 규모의 K방산시스템공학부가 개설될 예정이며, 2028년부터는 정원 50명의 방산무기체계 특수대학원도 신설될 계획이다.

이들은 모두 신설 과정에 있는 교육과정으로, 거창 지역의 산업 구조와 교육 여건에 비추어 조화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거창은 지리산·덕유산·가야산에 둘러싸인 생태 중심 도시이며, 간호학과를 중심으로 생명·보건·복지 교육에 특화된 지역이다. 이러한 특성과 비교해보면, 방산 관련 학문 도입은 다소 낮은 방향으로 느껴질 수도 있으며, 지역의 산업 구조나 교육 수요와의 정합성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단순한 행정적 효율성보다는, 지역성과의 조화를 중시한 기능 배치가 요구된다.

■ 지역 정체성과 함께 설계되는 교육 방향이 필요하다

거창은 생태와 평화의 가치를 중시해 온 지역으로, 생명과 돌봄 중심의 교육도시로 정체성을 다져 왔다. 새로운 학문 분야의 도입은 그러한 지역 정서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전쟁과 군수산업과 관련된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떤 미래상을 함께 그릴 수 있을지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역 정체성과 교육 방향 간의 연계성을 분명히 하는 과정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시민사회는 반대가 아니라 함께 준비하고자 한다

2024년 11월, 우리 단체는 양질의 교육 보장, 학사 자율성, 캠퍼스 독립 운영, 공정 예산 편성, 군민 의견 수렴 등 8가지의 핵심 요구사항을 성명서로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제안은 단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지역 대학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방향 설정을 위한 것이었다. 이후 이루어진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절차는 있었지만, 제안 사항들이 실행계획 수립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지는 여전히 확인이 어렵다.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있다면, 지역사회도 충분히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 실행 가능성과 지역 연결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

K방산시스템공학부와 방산무기체계 특수대학원 신설은 교육의 다변화, 고급 인재 양성, 국방 분야의 산학협력 확대 등 긍정적 가능성도 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 * 국방부, 방위사업청, 방산업체 등과의 실질적 협력 체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되었는가
- * 매년 정원 91명 충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자료와 전망은 무엇인가
- * 거창 지역 내에 방산 관련 실습과 연계 가능한 산업 기반이나 교육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가
- * 기존 간호·복지 등 지역 강점 학과와의 조화와 균형은 어떻게 고려되었는가
- * 이러한 학과 신설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산업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될 때, 지역사회도 더 큰 신뢰를 가지고 통합의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1. K방산시스템공학부 및 방산무기체계 특수대학원 배치와 관련한 실행 계획, 예산 확보, 협력 기관 등의 구체적 정보를 공개해 달라.
2. 거창의 산업 구조와 교육 기반에 부합하는 기능 배치를 중심으로, 장기적 실행 전략을 다시 검토해 달라.
3. 이행계획 수립 과정에 지역 주민, 학생, 교직원 등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
4. 시민사회가 제안한 요구사항을 실행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달라.

거창은 단순한 형식적 통합의 수단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 교육 모델의 중요한 거점이 되어야 한다. 교육은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지금 필요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준비와 소통이다.

2025년 6월 2일

함께하는 거창

시민단체 『함께하는거창』은 거창캠퍼스 방산학과 신설과 통합대학 운영 구상에 대한 추가 논평을 발표하였다.

본 논평은 기존의 문제 제기에 머무르지 않고, 변화의 흐름을 인정하면서 지역 정체성과의 조화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고자 하는 입장을 담고 있다.

방산 분야를 공공기술·사회안전·재난 대응 등 지역성과 연결된 융합형 교육으로 설계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역 주민과 학생, 교직원 이 통합대학의 방향 설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비 중단 이후의 재정 지속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책임 있는 계획 제시를 촉구하였다.

논평문

“우리는 여전히 질문한다. 그러나 이제는 방향도 함께 고민한다”

- 거창캠퍼스 방산학과 신설과 지역 정체성의 조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

2025년 6월 13일, 경상남도와 창원대학교는 거창·남해·창원 3개 도립대학 통합과 관련한 공식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학사 구조와 캠퍼스 특성화 방안, 재정 계획 등을 담은 통합대학 운영 구상을 공개했다.

거창캠퍼스는 ‘Green Convergence Campus’로 특성화되며, ‘K방산융합학과’ 신설, 학사전환제도(2년제에서 4년제 편입 유사 제도) 도입, 캠퍼스별 부총장제 운영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향후 10년간의 재정 계획도 함께 제시되었다.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은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2일 논평을 통해, 방산학과 신설이 거창의 지역 정체성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인지에 대해 질문한 바 있다.

그 입장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러나 최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폴란드를 방문해 K-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경남이 방산 수출의 국제 거점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정책 방향을 재확인한 사실은, 지역 시민사회도 이 흐름을 단지 비판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제 우리는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변화가 지역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1. 지역 맥락과 기술 변화가 만나는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

오늘날 방산은 무기나 군사에 국한되지 않고, 정밀기계, 드론, 인공지능, 자동화 등 다양한 첨단기술과 융합되고 있다. 특히 'K방산융합학과'라는 명칭이 말하듯, 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학과가 거창의 생명·복지 중심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부족하다.

거창의 지역성에 맞는 학과 구성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드론 기반 재난 대응, 국방의료기기,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국방 소방기술 분야 등은 지역이 가진 자원과 가치와의 연결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Green Convergence Campus'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회안전·공공기술로서의 방산 분야 접근이 필요하다.

2. 지역이 설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몇 차례 설명회와 간담회가 있었지만, 지역사회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6월 13일 공식 설명회는 통합 이후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공개한 자리였던 만큼, '설명'에 그치지 않고 '참여'로 이어지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거창캠퍼스의 진정한 성공은 지역 구성원들이 통합대학의 방향에 '동의'했느냐에 달려 있다.

이것이야말로 통합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의 첫걸음이다.

3. 재정 계획의 지속 가능성, 지금 설명되어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향후 10년간의 재정 계획이 함께 제시되었으나, 거창캠퍼스에 대한 도비 지원은 통합 후 5년까지만 제공되고 이후에는 전면 중단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국비 및 자체 수입으로 재정을 꾸려가겠다는 계획이 제시되었지만, 실질적인 확보 방안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 * 도비 중단 이후의 재정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 * 자체 수입의 기반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 * 세 캠퍼스 간 예산 배분의 형평성은 어떻게 확보될 것인지

이러한 물음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 없이 통합대학 운영이 이어진다면, 지역 사회는 지속적인 불안과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 우리는 다음을 제안한다

1. ‘K방산융합학과’는 지역 정체성과 기술 산업을 연결하는 융합형 공공기술 기반 학과로 설계되어야 한다.
2. 도와 대학은 도비 중단 이후의 재정 지속성, 자체 수입 기반, 예산 배분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3. 이행계획 수립 과정에 지역 주민, 학생, 교직원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우리는 다시 묻고, 함께 길을 찾고자 한다

이 통합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학과는 누구에게 힘이 되는가?

우리는 여전히 이 질문들을 품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질문에만 머무르지 않으려 한다.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의 변화가 만나는 지점을 고민하며,

지역과 함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고자 한다.

2025년 6월 18일

함께하는 거창

시민단체 『함께하는거창』은 KBS 라디오 생방송 전화 인터뷰에 출연해, 독립대학 통합과 거창캠퍼스 방산학과 신설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 인터뷰에서 이종성 사무국장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 방산학과 신설의 지역 정체성과의 조화 문제, 그리고 도비 중단 이후 재정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또한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공공기술 중심의 융합형 학과 설계와 지역 참여 구조 마련 등 대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가 지역 대학 통합의 비판자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주체임을 분명히 전달하였다.

『함께하는 거창』은 거창군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를 강화하고자 2021년 상반기부터 거창군의원 의정활동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평가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시민 감시 활동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총 9차례의 평가 결과를 공개해 왔으며, 모든 자료는 함께하는 거창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상반기 거창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 평가 방식: 인공지능(AI) 기반 회의록 데이터 분석
- 자료 출처: 거창군의회 홈페이지 최근회의록
- 분석 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6월 30일
- 대상 회기: 제284회 ~ 제287회 거창군의회
- 자료 제공: 함께하는 거창
- 결과 보고서: http://www.gcngo.org/gcngo/2025_1_ai.pdf

평가 방법 및 해석에 대한 안내

본 평가는 2025년 상반기 동안 개최된 제284회부터 제287회까지의 거창군의회 회의록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와 알고리즘은 ‘서로닷컴’이 개발·운영하였으며, 11명의 거창군의원 데이터를 동일한 조건에서 1인씩 개별 확인하여 검증하였다.

평가 결과는 회의록에 기록된 발언 전체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의원의 직책이나 소속 상임위원회에 따른 발언 기회 차이는 별도로 보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위원장 등 회의 진행 역할을 맡은 의원은 발언 총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 있으나, 정책적·비판적 발언 비율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의장의 경우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고 분과별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출석 횟수와 발언 지표에서 불리할 수 있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치발언 문장수’와 ‘대군수 지적 문장수’는 인공지능이 모든 의원의 발언을 동일한 기준과 조건에서 분석하고, 회의록 전체를 누락 없이 검토하여 산출한 지표로서 일정 수준의 객관성을 지닌다.

『함께하는 거창』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거창군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세밀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이를 통해 거창군민의 알 권리와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9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KBS 인터뷰)

『함께하는거창』은 KBS 라디오 라이브 인터뷰를 통해 2025년 상반기 거창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결과와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평가는 거창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을 인공지능(AI)으로 전수 분석해, 발언의 양뿐 아니라 정책성·비판성·대안 제시 여부 등 질적 요소를 함께 평가한 것이 특징이다.

함께하는 거창은 이 평가가 군의원을 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민의 알 권리를 넓히고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 제도임을 강조했다.

10 거창군의회 해외출장 성과 분석 논평

거창군의회는 2024년 10월, 6박 8일간 미국으로 해외 공무출장을 다녀왔다. 총 6천3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이후 의정활동에서 출장 성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된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본 단체가 2025년 상반기 본회의 발언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의원 11명 중 8명은 출장 관련 발언이 전무했다.

보고서에 담긴 다양한 학습 내용은 군정 질문이나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는 해외출장이 군정 발전이 아닌 형식적 외유에 그쳤음을 보여준다.

논평문

거창군의회 해외출장, 계획과 보고는 화려했으나 의정활동 반영은 미미, 군민 세금만 낭비했다

거창군의회는 2024년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뉴욕·뉴저지·워싱턴 등으로 6박 8일간 해외 공무출장을 다녀왔다. 의원 11명과 직원 6명 등 총 17명이 참여했고,

총예산은 63,212,760원이었다.

출장 목적은 △센트럴파크 관리재단과 같은 공원 운영 사례 △차이나타운 YMCA와 청소년 체육시설 운영 △포트리·페어팩스 의회의 선진 지방자치 제도 △워싱턴 국회의사당과 백악관 등 민주주의 현장 견학 △허드슨야드·리틀아일랜드 등 도시재생 사례 시찰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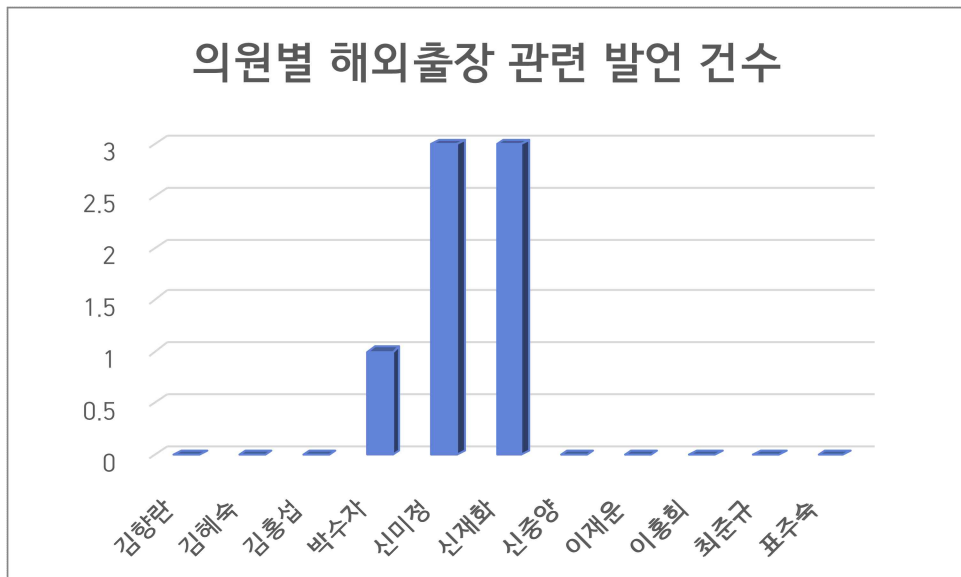
계획서와 심사위원회 회의록에서는 “외유성 비판을 피하려면 실질적 성과를 반드시 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당부가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결과보고서 또한 센트럴파크 ‘Adopt a Bench’ 기부 프로그램, 민관 협력형 재단 운영, 시티매니저 제도 등 다양한 학습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본 단체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의원 11명의 본회의 발언록을 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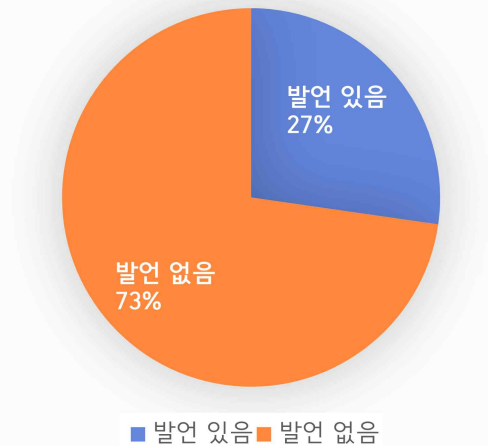
분석한 결과, 해외출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발언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11명 중 8명은 전혀 언급이 없었으며, 3명이 소수의 발언을 했으나 단순 사례 언급 수준에 머물러 군정질문이나 정책 제안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1. 정량 분석 결과

- * 11명 의원 중 8명은 해외출장 관련 발언 없음
- * 3명만이 관련 발언 일부 있음 (총 7건)



해외출장 관련 발언 의원 비율



2. 정성 분석 결과

- * 박수자 의원: 센트럴파크 관련 사례 언급이 있었으나 군정 질문·정책 제안으로 이어지지 않음.
- * 신미정 의원: 뉴욕·미국·센트럴파크를 언급했지만, 교육·관광 등 현안과 연결되지 못하고 참고적 수준에 머물.
- * 신재화 의원: 미국 관련 표현이 있었으나 수사적 성격에 가까웠고 정책적 의미로 구체화되지 않음.

결과적으로, 출장 보고서에 기록된 주요 학습 성과가 실제 의정활동에 활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3. 구조적 문제

- * 해외출장 목적과 군정 현안의 연계 부족
- * 귀국 후 조례 제정·예산 심사·군정 질문 등 핵심 활동에 성과 반영 미흡
- * 성과 환류 과정이 부재하여 군민 세금이 외유에 쓰였다는 비판 불가피

4. 결론과 제언

거창군민은 의원들의 해외출장을 단순한 건문 확대가 아니라, 군정 발전을 위한 투자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분석은 계획·보고와 실제 의정활동 간의 괴리를 명확히 드러냈다.

따라서 앞으로는

1. 출장 전후 과제 연계: 군정 현안과 명확히 연결된 목적 설정 및 귀국 후 적용 방안 제시
2. 성과 공개 및 검증: 군민 대상 설명회·공청회를 통한 성과 공유 및 환류
3. 책임성 강화: 출장 성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제도적 책임을 묻는 장치 마련

함께하는 거창의 입장

“지방의회 해외출장은 군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적 활동입니다.

그러나 거창군의회는 이번 해외출장은 계획과 보고는 화려했으나, 실제 정책투자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해외출장을 단순한 여행이 아닌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투자로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2025년 10월 13일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

11 KBS 라디오 인터뷰 | 거창군의회 해외출장

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2024년 거창군의회 해외 공무출장이 실제 의정활동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점검했다.

『함께하는거창』은 미국 출장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그리고 2025년 상반기 본회의 발언록을 전수 분석한 결과, 출장 성과가 정책 제안이나 군정 질문으로 이어진 사례가 거의 없음을 확인했다.

군민 세금으로 진행된 해외출장이 실질적인 군정 발전으로 연결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앞으로는 성과 환류와 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

12 감악산 교통대란, 차량 중심 축제의 한계

올해 감악산 꽃&별여행 축제에서 약 32만 명의 방문객이 몰렸지만, 자가용 중심 교통 운영으로 최대 4~5시간의 극심한 정체가 발생했다. 이는 일시적 사고가 아니라, 하부 주차·순환 셔틀 부재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예견된 결과였다.

『함께하는거창』은 이 사태를 계기로 차량 중심 관광에서 벗어나, 감악산-창포원-수승대-Y자 출렁다리 등을 연결하는 ‘사람 중심 순환형 교통체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문

감악산 교통대란의 교훈 — 거창군은 차량 중심 축제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교통’으로 전환해야 한다

거창군 발표에 따르면, 올해 감악산 꽃&별여행(축제)에는 약 32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규모 인파에 비해 교통대책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감악산 진입로에서는 최대 4~5시간에 달하는 정체가 이어졌고,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시내 입구부터 3시간 30분이 걸렸다”,

“3km를 2시간 동안 올라갔다”, “5시간 가까이 정체됐다”는 글이 잇따랐다.

남상면 주민들은 차량이 마을 입구까지 밀려와 집 앞 도로가 완전히 막혔다며 불편을 호소했고,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1km 이상 걸어야 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이 사태는 단순한 돌발이 아니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행정의 구조적 문제다.

이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면, 구조적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다.

■ 문제점

첫째, 정상부까지 자가용 진입을 허용한 교통 설계가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좁은 산악도로에 수천 대의 차량이 몰리며 상·하행이 동시에 마비되었다.

둘째, 하부 주차장 및 순환 셔틀 체계의 부재로 인해
창포원 등 넓은 공간이 있음에도 분산 주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실시간 안내와 통제 부족으로
운전자와 관광객이 대기 시간을 알 수 없었고,
일부 차량은 엔진 과열과 사고 위험에 노출되었다.

넷째, 행정의 대응이 사후적이었다.
군은 교통 불편에 대해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셔틀버스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문제는 이미 여러 해 반복되어 온 사안이었다.

■ 왜 문제인지

감악산 교통대란은 감악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거창군 전체 관광 교통체계가 ‘차량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창포원, 수송대, 산림레포츠파크 등은 물론,
Y자 출렁다리 역시 개별 셔틀이 운행되고 있지만,
서로 연결되지 않아 분산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특정 시기와 장소로 교통이 집중되고,
같은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행정은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수치를 성과로 내세웠지만,
군민의 불편과 지역 이미지 훼손은 더 커졌다.

거창의 관광은 ‘많이 오는 축제’보다 ‘편히 다녀가는 축제’로 바뀌어야 한다.
교통을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방문객이 찾아와도
결국 “불편한 도시”로 인식될 뿐이다.

■ 해결 방안

1. 감악산 중심이 아닌, 거창 전역을 연결하는 순환형 교통체계 구축

감악산-창포원-수승대-Y자 출렁다리-산림레포츠파크를 잇는
'거창형 순환 셔틀 루프(Geochang Tourist Loop)'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때 기존 Y자 출렁다리 셔틀버스 노선은 통합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 1단계: 감악산-창포원 간 순환 셔틀 우선 운행

→ 가장 정체가 심각한 감악산 진입로의 교통량을 즉시 완화하고,
창포원을 하부 거점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 2단계: 감악산-수승대 간 순환 셔틀 운행

→ 축제 기간뿐 아니라 상시 관광 교통 분산을 위한 두 번째 축을 형성한다.

* 3단계: 창포원-수승대-Y자 출렁다리 구간 시범 루프 운영

→ 기존 Y자 셔틀과 연계하여 동·서부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고,
체류형 루프 구축을 시험 운영한다.

* 4단계: 창포원-수승대-Y자-산림레포츠-감악산 완전 순환 노선 구축

→ 거창 전역을 잇는 완전한 관광 순환망 완성.
차량 분산, 환경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아울러 축제는 연 1회 열리므로,

상시 셔틀을 군이 직접 보유·운영하기보다는

지역 관광버스나 운수업체 차량을 단기 임차해 한시 운행하는

'피크 한정 임차형 셔틀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축제기에는 해당 차량이 민간 운행으로 복귀하도록 하여

예산 낭비 없이 실질적 교통 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 해외의 검증된 사례를 참고하라

* 미국 자이언 캐년 국립공원: 순환 셔틀 도입 후 차량 진입량이 90% 이상

감소하고, 교통 혼잡이 약 70% 완화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 일본 홋카이도 비에이: 순환버스를 통해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며 자가용 의존도를 낮추고, 관광객 분산과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있다.

* 미국 세도나: 실시간 교통관제 시스템과 셔틀 연계를 통해 방문객 이동 효율을 높이고, 도심 정체 구간을 40% 이상 줄였다.

거창군도 셔틀버스 운행만이 아니라

입차 총량제, 시간대별 예약제, 실시간 교통 안내 시스템을 병행해야 한다.

3. 행정과 시민이 함께하는 ‘감악산 교통안전협의회’ 구성

군청, 경찰, 소방, 주민대표,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사전 점검과 사후 평가를 정례화해야 한다.

교통문제를 행정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군민과 함께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 우리의 요구

1. 감악산 축제 교통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공개하라.
2. 순환 셔틀 및 차량총량제 도입 기본계획을 수립하라.
3. 감악산-창포원 셔틀 시범 운영을 조속히 시행하라.
4. 교통 민원·정체 기록·안전사고 통계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라.
5. ‘거창형 순환 관광 루프’ 도입 검토 용역을 착수하라.

이상의 조치는 거창군 행정이 신뢰를 회복하고,

군민의 불편 없는 축제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들이다.

함께하는 거창은 이 문제가 단순한 축제 운영 미비가 아니라,

거창군 행정 전반의 대응 체계를 점검할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 맺음말

감악산 교통대란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행정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사건이다.

이제 거창군은 ‘더 많은 차량’이 아니라 ‘덜어내는 교통’을 선택해야 한다.
행정이 교통을 관리하지 못하면 축제의 의미도 퇴색된다.
사람 중심의 교통 체계와 순환형 관광 전략이
거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여는 길이다.

2025년 10월 24일

함께하는 거창

13 거창 보행환경 실태조사와 행정 대응 현황

『함께하는거창』은 2024년 한 해 동안 거창군 전반의 보행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보행자 안전과 생활 불편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서를 거창군에 공식 제출하였다.

이번 조사는 일회성 민원이 아니라, 군민의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행정에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조사 과정에서는 보도 단절 구간, 횡단보도 및 교차로 안전 문제, 노약자·장애인 이동 불편 요소, 학교·시장·주거지 인근 보행 취약 구간 등을 중심으로 현장 확인과 사례 정리를 병행하였다. 특히 차량 중심 도로 설계로 인해 보행자가 반복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적 문제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함께하는 거창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행 동선 개선, 안전 시설 보완, 생활권 중심 보행정책 전환 등을 담은 공식 건의서를 거창군에 제출하였다. 이는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행정이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적 검토를 요청하는 성격의 제안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거창군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이나 검토 결과는 회신되지 않았다. 『함께하는거창』은 이를 특정 사안의 무응답이 아니라, 보행자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행정의 대응 구조를 점검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본 단체는 향후에도 이 사안의 경과를 지속적으로 기록·공개하고, 군민의 안전한 보행권이 행정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재요청과 후속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보행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전문은 『함께하는거창』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http://www.gcngo.org/?contr=Bread&id=10790>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26년 사업 계획

2026년 『함께하는계장』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펴봅니다.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들은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채워나가겠습니다. 『함께하는계장』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무국

- “군의원 업무평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함께하는계장』 회원들과 함께 주관적 평가도 병행해 나가겠다.
- 기본업무에 충실하며, 『함께하는계장』이 해야 할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
- “군정감시 활동, 지역 정책 제안, 조직의 운영, 지역 연대”를 활성화하겠다.

■ 알 림

- 『함께하는계장』의 활동 내용을 회원들께 잘 전달하도록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잘 활용하겠다. 특히 『함께하는계장』 카톡방이나 문자로 최근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다.

■ 회원 활동

- 회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 회원들의 요구, 취향에 따라 새로운 소모임 혹은 함께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겠다.

■ 후원이사회 활성화

- 재정 확보를 위해 후원이사회를 활성화하겠다.

■ 부속 연구소

- 동영상은 제작하여 『거창방송』 유튜브 채널에 등록하겠다.
 - 사업방향 : 거창지역 현황분석, 정책대안, 거창의 인물, 거창의 역사, 거창의 지리, 거창의 문화, 거창인의 작품 등, 기타 거창에 관련된 주제.
- ※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함께하는거창』 Positive 정책

-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에 좀 더 중점을 두겠다.
- 거창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하겠다.
- 투명한 기부문화 플랫폼을 구상하겠다.

■ 중점사업

- 군정감시 비판기능 강화.
- 군의원, 군수 활동평가.
- 읍내 (장애인) 보행자 조사 개선안 제안.
- 거창의 가치 있는 자료 결집(글, 사진, 동영상)

2026년 예산(안)

1. 일반회계(사무국)

(단위: 원)

| 수 입 | | | 지 출 | | | | | |
|------|---------|------------|-------|--------|------------|---------|--|------------|
| 구 분 | 계정과목 | 금 액 | 구 분 | 계정과목 | 금 액 | | | |
| 회비수입 | 회비수입 | 13,000,000 | 인 건 비 | 활 동 비 | 14,400,000 | | | |
| | 후원금(사) | 0 | | 상 여 금 | 300,000 | | | |
| | | | | 퇴직위로금 | 1,200,000 | | | |
| | | | | 복리후생비 | 0 | | | |
| 기타수입 | 이자수익 | 5,000 | 사무유지비 | 건물관리비 | 240,000 | | | |
| | 차 입 금 | 0 | | 기기구입비 | 500,000 | | | |
| | 잡 수 입 | 0 | | 사무용품비 | 300,000 | | | |
| | 전년도 이월금 | 7,954,386 | | 세금과공과금 | 5,000 | | | |
| | | | | 소모품비 | 300,000 | | | |
| | | | | 수 선 비 | 0 | | | |
| | | | | 수도광열비 | 500,000 | | | |
| | | | | 통 신 비 | 550,000 | | | |
| | | | | 사 업 비 | 도서인쇄비 | 0 | | |
| | | | | | 발 송 비 | 500,000 | | |
| | | | | | 분 담 금 | 300,000 | | |
| | | | | | 사 업 비 | 77,816 | | |
| | | | | | 회원활동비 | 400,000 | | |
| | | | | | 회 의 비 | 200,000 | | |
| | | | | | 출장연수비 | 0 | | |
| | | | | | 잡 비 | 300,000 | | |
| | | | 사업외비용 | 차입금 상환 | 0 | | | |
| | | | | 예 비 비 | 886,570 | | | |
| | | | 수입합계 | | 20,959,386 | 지출합계 | | 20,959,386 |

『함께하는거창』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모임은 『함께하는거창』이라 한다.

제2조(목적) 『함께하는거창』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동력으로 하여, 생활세계에서의 주권확보와 참여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실천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나아가 참여민주주의 사회의 실현과 자치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함께하는거창』의 사무소는 거창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함께하는거창』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운동-사업을 전개한다.

1. 주민자치 운동 : 참여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에의 주민참여 활동
2. 자치공동체 회복운동 : 자치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활동
3. 공론영역 형성운동 : 생활세계의 과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리적 공론을 형성하는 활동
4. 자치언론 개혁운동 : 자치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 언론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활동
5. 민주시민 교육운동 : 주민들의 주권의식과 참여의식 재고를 위한 회원 및 주민교육 활동
6. 기타 이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회원가입) 『함께하는거창』의 목적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제6조(삭제, 2006년 1월 17일)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함께하는거창』이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함께하는거창』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3. 『함께하는거창』 내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8조(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함께하는거창』의 정관을 준수할 의무
2. 『함께하는거창』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상벌) 『함께하는거창』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다음과 같은 포상과 징계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회원총회에 보고한다.

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회의 포상 대상이 된다.

1. 회원으로서 본 회의 각종 사업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는 자.
2. 비회원으로서 참여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견책 또는 경고를 통해 반성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인정되는 자.
2. 이 모임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해 본 회의에 피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자.
3. 위항에 해당하는 임원의 경우 그 직의 수행을 중지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제4장 기 구

제1절 회원총회

제10조(지위) 회원총회는 『함께하는거창』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1조(소집) 정기 회원총회는 연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임시 회원총회는 재적 회원 1/5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권한 및 의결) 회원총회는 『함께하는거창』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토의, 결정하며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홈페이지 또는 **SNS**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하고, 의결할 내용을 반드시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모든 회원에게 서면 및 **문자로** 통지하여야 한다. 회원총회에서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기 회원총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임원개선(공동대표, 감사)
3. 예·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4. 기타 중요한 안건

제13조 (출석) 회원은 회원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못할 경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직접출석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단, 임원선출은 제외한다.

제14조 (임원개선의 절차) 임원의 선출방법은 회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사무국장은 공동대표의 합의로 임명하고 회원총회에서 승인 받는다. 단, 『함께하는거창』의 활동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이해 충돌의 범위와 정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2024. 1. 31 개정)

제2절 운영위원회

제15조(지위) 운영위원회는 『함께하는거창』의 일상적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련한 사항들을 의결·집행하는 기구이며, 모든 회의는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제16조(구성) 운영위원회와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각 회원활동기구의 대표와 사무국장 및 후원이사회 회장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확대운영위원회는 제16조의 1항의 구성원과 후원이사, 고문, 자문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3. 운영위원장은 상임공동대표가 겸직하고, 부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17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매 1개월마다 운영위원장이 정기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확대운영위원회는 제16조 2항에 의거 구성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 1/5이상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아래에는 상임공동대표를 회장으로 하는 상시 회의기구인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을 선임하여 운용할 수 있다. 운용 규정과 방식은 정기운영위원회의 재량으로 한다.

제18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권한) 운영위원회 및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각종 사업 및 활동의 입안과 집행
2. 회원활동 기구의 승인 또는 승인취소
3. 운영위원 위촉, 후원이사,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
4.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내규의 제정과 개정
5. 사무국의 유지,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7. 기타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무의 처리

제20조(사무국) 『함께하는거창』의 활동을 총괄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간사, 정책, 기획, 홍보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제3절 공동대표, 고문, 자문위원회, 감사, 후원이사회

제21조(공동대표 및 상임공동대표)

1. 공동대표는 『함께하는거창』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공동대표는 3인 이내 두고,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 공동대표 호선에 의해서 1인의 상임공동대표를 선출한다.

제22조(고문) 『함께하는거창』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문을 하고, 지도를 받기 위하여 지역의 신망 있는 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23조(자문위원회) 『함께하는거창』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문에 응할 각 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

제24조(감사) 『함께하는거창』의 사업 및 재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후원이사회) 『함께하는거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후원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고, 후원이사 호선에 의하여 후원이사회 회장을 선출한다.

제4절 회원활동기구

제26조(회원활동기구) 회원은 본 회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회원활동 모임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자발적 회원활동 모임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으로 해서, 공식 회원활동기구로 등록되며,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① 의무

1. 활동상황에 대하여 회원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활동결과에 대한 대외적 발표 및 대응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권리

1.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인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2. 활동에 필요한 회원지도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3. 필요한 대외적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절 연구소

제27조(명칭 및 소속) 본 연구소는 '『함께하는거창』 부속연구소'(약칭 함께하는 연구소)라 칭하고 『함께하는거창』 산하에 둔다.

제28조(목적) 연구소는 거창과 지역의 전반에 걸친 연구를 진작하고 그 결실을 결집하여 지역의 발전은 물론 군정, 행정 등 일선 현장에서의 활동 발전과 내실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되, 본 정관의 '제2조'와 '제4조'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제29조(주요사업) 연구소는 '제27조' 와 '제28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거창 지역에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 대한 연구
2. 거창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그와 관련된 전문인력 또는 단체의 연대활동
3. 학술세미나, 발표회, 강연회 등의 개최
4. 관련 연구문헌 및 자료 수집
5. 학술지 및 연구자료집 발간
6. 유관 연구소 및 학술단체들과의 공동작업
7. 그 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5장 재정

제30조(회계연도) 『함께하는거창』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예산 및 결산) 1.운영위원장은 다음해 예산안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당해 연도 결산(안)은 회원총회 개최 전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회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3.정기총회에서 승인받은 예.결산서 및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함께하는거창』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2023. 1. 31 개정)

제32조(수입)

1. 『함께하는거창』의 수입은 회원회비, 후원금, 특별기금, 기타수익으로 한다.
2. 특별기금은 후원이사회에서 관리하며 그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할 때 후원 이사회의 결의를 따른다.
3. 특별기금의 이자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회비) 회원회비는 내규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34조(정당 활동의 제한) 공동대표와 사무국장 및 운영위원은 선출직공직에 입후보하는 경우, 정당의 주요당직을 맡을 경우 사임하여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라도 자동으로 그 직을 상실한다.

제35조(준용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36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함께하는거창』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내용을 지역신문, 인터넷 등에 공고하며,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2023. 1. 31 개정)

부 칙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1년 2월 23일 정기총회에서 1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4년 7월 16일 임시총회에서 2차 개정(전면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5년 1월 21일 정기총회에서 3차 개정, 통과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6년 1월 17일 정기총회에서 4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9년 1월 20일 정기총회에서 5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2년 1월 31일 정기총회에서 6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3년 1월 29일 정기총회에서 7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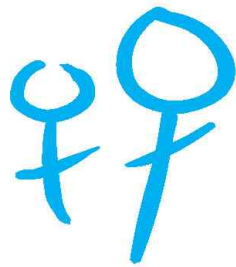
2013년 1월 28일 정기총회에서 8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7년 2월 2일 정기총회에서 9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9년 1월 24일 정기총회에서 10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23년 1월 31일 정기총회에서 11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24년 1월 31일 정기총회에서 12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www.gcngo.org